

22대 총선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목차

- I. 22대 총선 공약
- II. 공약 분석 및 시사점
- III. 정책 제언

22대 총선의 양대 정당의 주요 공약은 저출생·기후위기·민생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당의 10대 정책 공약 주요 내용
 - 모든 정당은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고, 민주당은 현금지원책에, 국민의힘은 시스템도입에 초점,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 제안
 - 기후위기 관련해서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현재의 3배로 확대, 국민의힘은 소형 원전 지원,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확대 공약
 - 민생 공약은 민주당은 기본주택, 대출이자 경감, 전세사기 피해구제 외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애로 해결과 재형저축 제도입

복지 관련 공약 저조, 과감한 인구정책, 재정계획 부족의 문제 반복

- ▶ 60대 이상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고령층 공약에 집중, 저소득층·장애인은 미미
 - 전통적인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약은 21대 총선과 비교하여 감소하였고, 그레이(gray)총선이 예상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실버타운 확대, 무상어르신 패스,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책 등
- ▶ 저출생 원인 진단에 따른 과감한 공약 제시
 - 민주당은 경제력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 기본소득 등 과감한 현금성 지원으로 저소득층 양육부담 해소 기여 기대, 국민의힘은 육아 부담 격차노동 환경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국가·기업·가족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 제시
- ▶ 과감한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 계획의 구체성이 낮은 문제 반복
 - 간병비 급여화에 연 15조 원, 저출생 대책 연 23조 원, 도심철도 지하화에 80조가 들 것으로 추산, 공약 이행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 공약이 현실화되는 지역사회와 공약 이행을 함께하고 각 직능단체가 제안한 예민한 의제에 대해 총선 후 의견 수렴하여 공약 보완 과정 필요

정책 제언

- ▶ 경기도 관련 주요 공약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22대 국회의 입법 제·개정 과정에 경기도 이해 반영 체계 마련
- ▶ 예산 규모가 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당의 공약 키워드는 저출생·기후위기·민생 문제 해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10대 공약 제시¹⁾

- ▶ 4월 10일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은 저출생·기후위기·민생문제 해결
 - 양당은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민주당은 1억 대출과 아동수당 20만원 상향 등 현금 지원책에 국민의힘은 인구부신설 등 시스템 도입에 초점을 둠
 - 저출생과 맞물린 고령화 대책으로 양당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등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를 공통적으로 제시
 - 기후위기 대책은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소형 원전 지원과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제시
 - 민생 관련 공약으로 민주당은 기본주택, 대출이자 경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을,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애로(인력수요, 산업단지 규제 개혁 등)해결 및 재형저축 재도입이 주요 내용
 - 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3월24일 유세 중 민생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제안

〈표 1〉 22대 총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소득·주거 등 전 생애 기본적인 삶 보장 월3만원 청년 패스, 기본주택 100만호,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1 일·가족 모두 행복 ‘인구부’ 신설, 아바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국민의힘
	저출생 문제 해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1억원 대출	2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하고 단계적 무상 시행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3배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3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2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연구·개발(R&D) 예산 5% 확보, 광역행정청 설립	4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 강화, 지역토지 규제 재검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5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 ‘안심주소’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국민안전권을 최우선으로 시흥수예측 시스템 구축, 하류 저류시설 확충	6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고통 덜기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출이자 경감	7 교통·주거격차 해소 청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열차 도입	
	전정위기 막고 평화 다시 만들기 주변 4강 외교 재편, 당당한 대일 외교	8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재형저축 재도입, 청년 연령 34→39세로 확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 검찰개혁 완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9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대통령재요구권사면권 한계 명문화,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산투표	10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로, 소형원전·재생에너지 확충	

자료 : 한국일보(24.3.1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뜯어보니... 약자-소수자 정책 실종” 기사와 경향신문(24.3.14) “국민의힘 ‘개발사업’,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실정’ 강조[총선 10대 공약]”의 기사 내용을 정리함

- ▶ 제3지대 신당과 소수 정당은 각 정당의 지향을 담으면서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독특하고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생 대책은 공통으로 제시
 -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움시티’ 건설 등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1호 공약, 새로운미래는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녹색정의당은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소멸 5대 약속’,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 저출생대책으로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 간 월수입의 100%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조국혁신당은 ‘저출생대응책임부처’ 설치, 녹색정의당은 전생애 통합돌봄강화를 위한 ‘돌봄부총리제’ 제시

1)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내용을 기초로 3월 31일까지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표 2〉는 지역구 후보(궐호안은 지역구 후보 숫자)를 낸 정당 중심으로 복지 및 관련 분야 정리한 것임

1. 22대 총선 공약

지역구 후보를 낸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복지 및 관련 분야 공약을 정리

〈표 2〉 각정당별 주요 공약

구분	더불어민주당(154석)	국민의 힘(114석)	녹색정의당(6석)	개혁신당(4석)	새로운미래(3석)	
저출생	공약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가족 모두 행복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넓은 규제 및 복지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배움목	미래·저출생·청년
	내용	· '우리아이보듬주택'(2~3 자녀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1억 대출 자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 ~18세 매월 아동 바우처(20만 및 펀드(10만)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육아휴직 급여·유발별 프리임금 급여 50만원 추가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출산시 아바후가 1개월(유급)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 출생-10살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자동 육아휴직제, 아바육아 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상한제 인상 ·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일하는 출산 여성 3개월간 최대 630만원 지급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 ·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보험요율 상향 12~15%, 수급율 40% 유지, 장기연체 및 납부예외자 두루누리 사업 적용,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연금' 도입,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확대)
돌봄·교육	공약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충족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저출생 해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포용 복지·포용 돌봄/인구소멸·균형발전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금 축소,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운동네 초등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 확대 · 놀음학교 확충, 상시 운영(방학중), 단계적 전면 무상	· 전생애 통합돌봄 실시 · 돌봄부총리제 도입 ·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 협력하향 차별규범 대학 상황평준화, 대입 절차평가,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	· 수확과목 수업강화 및 수포자 반박법 추진 · 수행평가제 폐지 · 사립대입 전형지출성보장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식선발	· 돌봄청 신설 · 아동수당 확대 · 국가책임장래제 도입 · EBS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청년	공약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넓은 규제 및 복지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배움목	미래·저출생·청년
	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 미진학 청년 대상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취업전 청년 취업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지원강화 · 청년 문화예술터스 지원 대상 확대(~24세) · 청년 근로여건 마련 ·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무상기숙사 실시, 청년 보증부월세, 청년 1인 가구 사회주택 공급	· 유연근로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벤처 생태계 강화로 도전하는 청년의 경제기여 지원	· 청년 생애첫든든통장, 기회금융통장, 생애첫 주택 대출 지원 · 일하는 청년 대상 목돈마련,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장려금 확대 ·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노인·장애인·여성	공약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넓은 규제 및 복지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배움목	포용 복지·포용 돌봄
	내용	·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통한 주7일 점심 제공 ·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공급 확대 · 유류부지 활용한 도심인접 파크골프장 설치	· 청년 연장 노인 최저소득 보장제, 노인일자리 확대 · 공공서비스 아파트, 살바주택, 공공립 장기요양 확대 · 발달장애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고용상려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원 확대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장기요양보험 개편 · 치매국가산정특례 적용 · 노인돌봄노동자 확대 ·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 장애인 이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 장애 연령별 유형별 복지 확대 ·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보건·의료	공약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자랑스러운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생명과 안전
	내용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급여확대, 특정 질환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대 격차해소특별법 제정 · 지역 스마트공공병원 육성 · 소아전문 응급 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 공공의대 설치 · 70개 중진료원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100병상 국립의과대학 문대학원 설립 · 100만원/년 병역비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2차 의료기관 미설치 지역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분원 근무시 인센티브 의무화, 분원 의료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적정수가 및 지불보상체계 및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
기후·에너지	공약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탄소제로 및 미래 지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내용	·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RE100 제도 개선 및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 기후위기 대응 2배 확대 · 원전·재생에너지 확충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 청정수소 생산지 전환 · 기후테크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기업 육성	· 기후경쟁부 신설 · 탄소세 부과, 기후배당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만개 조성 · 녹색주택 100만호 공급 ·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CF100/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확산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 미래차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	·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 · 통합발전소 사업 지원 · 기후위기신산업분야 '25년 R&D 예산 30조 원 회복
교통	공약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생명과 안전
	내용	·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교통패스(청년패스/국민패스/어르신패스) 도입	·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원 기후패스' 도입 · 교통기본법 제정 · 버스 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 도입 · KTX-SRT 통합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 경쟁을 통한 저렴한 고속철 도입	· 대중교통 월6만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정당의 공약과 유권자 및 전문가 의제는 **민생 안정**으로 거의 유사

유권자는 '민생안정'을, 사회복지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제1 의제로 선택

-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권자 중심, 입법과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²⁾한 10대 의제를 발표하였으나 순위는 상이
 - 2년여 지속된 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대책을 1순위 핵심의제로 선택,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도 상위권이나 의제 순위는 상이(相異)

〈표 3〉 4.10 총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순위	4.10총선 10대 핵심의제 및 우선순위	순위	1,2,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선택수)
1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1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2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2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3	사회적 갈등 완화	3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4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4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5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5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
6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	6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
7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 실업 대책 마련	7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
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8	사회적 갈등 완화
9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	9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10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	1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 실업 대책 마련

자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24.2.14). "2024 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10대 의제 공개"

- ▶ 각 정책분야별로 직능단체는 공동 공약을 개발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범사회복지계 전체 회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제1 의제로 제안
 - 각 분야별 직능단체(의료 분야는 13개 전문기관 참여, 교육분야는 교총이 참여)는 공동정책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
 - 복지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0개 직능단체가 모여 회의한 결과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별(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사회) 정책을 건의³⁾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민간)사회복지성장을 위한 법·제도 발전(3개), 사회복지시설 확대 등 서비스 기반·여건 개선(2개), 종사자 처우개선(3개), 지역기반 전달체계 개편(2개) 등 총 10개 공약을 제시

경기도 관련 공약은 '메가서울과 경기특자도', 'GTX',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

- ▶ 민주당은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
 - 전체 정당 공약과 별도로 3월 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수도권정비법 개정,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 RE100 플랫폼 구축 등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
- ▶ 국민의힘은 지난 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메가시티 서울)과 경기 분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서울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약 제시
 - GTX A, B, C노선에 이은 D, E, F 노선까지 설치하여 1시간 생활권 조성, 경기 남부(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완화 등 정책 지원

2)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 27일부터 약 43일간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에 의뢰해 1월 16일, 17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함(<http://manifesto.or.kr/?p=9690>)
 3) 사회복지분야 정책 건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https://www.bokji.net/ssn/iop/06_01.bokji)

양당의 경기도 관련 공약 내용은 유사하나 해결 방향은 차이

I. 22대 총선 공약

22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39년 만의 최저수준, 21대 국회 공약이행률은 51.8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51.83%

- ▶ 3월22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38개 정당에서 253명의 후보가 등록
 -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2.75:1로 21대 총선(4.4:1)은 물론 39년 만의 최저치이며, 경기도(2.47:1)도 평균보다 낮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
 - 남성(589명)이 전체 85.86%이고(여성은 97명, 14.13%), 평균 연령은 56.7세(21대 54.8세), 최연소 후보는 28세(1996년생), 최고령 후보는 85세(1938년생)
- ▶ 4년 전인 2020년 4월 15월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180석(60%)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21대 총선 투표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66.2%로 이전 총선 투표율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21세기에 치러진 선거 중 대선(大選)을 제외하고 최고치
 -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등 총 180석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6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미래통합당(103석)으로 34.33%를 차지

〈그림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료: 21대 국회의원 선거 나무위키(<https://namu.wiki/w/%EC%A0%9C21%EB%8C%80%20%EA%B5%AD%ED%9A%8C%EC%9D%98%EC%9B%90%20%EC%84%A0%EA%B1%B0>)

- ▶ 임기 만료가 5개월여 남은 지난 1월 공약 이행 정도 분석 결과, 공약 완료율은 51.83%로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입법공약 완료율은 48.87%로 절반 이하⁵⁾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대상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31일 발표
 - 21대 국회 공약 완료율은 20대(46.80%), 19대(51.24%), 18대(35.16%)와 비교하여 높아졌고, 지역별 공약완료율은 광주지역(66.86%) 1위, 강원지역 (44.74%) 최하위
 - 입법공약 완료율은 48.87%인데 이는 전체 공약(9,502개) 중 입법 공약 비중이 14.94%로 낮아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에 치중했기 때문
 - 입법 공약 중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77%에 달하고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투표율 46.1%, 19대 총선 투표율 54.2%, 20대 총선 투표율 58.0%임

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분석 결과' 보도자료 참조함(http://manifesto.or.kr/?p=9655&page_num=)

II. 공약 분석 및 시사점

양대 정당의 복지 공약은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은 미미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약자·소수자를 포괄하는 복지 관련 공약이 저조

- ▶ 양대 정당의 취약계층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민생과 건강 분야에 취약계층 개별로 포함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청년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10대 공약에 포함
 - 민주당은 민생분야에 어르신 주 5일 점심밥상과 무상어르신패스, 건강과 행복한 삶 분야에 어르신 간병비 지원, 장애인 권리보장, 최후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⁶⁾와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을 공약으로 포함⁷⁾
 -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청년과 노인을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각 대상 별 삶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포함
 - 청년관련 공약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천원의 아침밥 확대)
 - 노인대상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간병비 국가책임 강화, 주7일 점심제공 등 어르신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중산층 실버타운과 시니어체육시설 확대
 - 소수정당들의 경우 “돌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정의당은 ‘생애통합돌봄’분야에 대상별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를, 새로운미래는 ‘포용복지·포용돌봄’분야에 돌봄청 신설과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공약을 포함
- ▶ 전통적인 복지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은 21대 총선과 비교하여 감소하였고, 60대 이상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고령층 공약이 두드러짐
 - 연령별 유권자 수가 사상 최초로 60대 이상(6070세대, 31.4%)이 30대 이하(2030세대, 31.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이른바 그레이(gray) 총선이 전망되면서 고령층의 표심을 겨냥한 다수의 어르신 공약을 제시하는 반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 공약은 감소
 - 다수의 어르신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임에도 소득보장을 위한 공약도 부족
 - 21대 총선에서 강조됐던 여성 안전 강화는 물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공약이 공통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거나 이전과 다르지 않은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장애인 공약이 정당정책에 포함되지 않음
 - ▶ 노인공약의 핵심은 ‘간병비 급여화’로 양당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매년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음
 - 20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내뱉던 공약이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既)포함
 - 연간 15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노인인구(지출요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수입요인)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어서 국민의 추가부담 등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대표적 공약

6) 최후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행방법에 포함되어 있음

7)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등의 이행 방법이 제시됨

II.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모든 정당이 저출생에 대한 공약을 원인 진단별로 제시, 공약이행에 따른 기대도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 제시는 미흡

출산율이 0.72명으로 급감하면서 각 당의 앞순위 공약은 인구 관련 정책

-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생을 국가소멸의 문제⁸⁾로 인식하고 모든 정당은 총선의 우선순위 공약으로 인구 대책 제시
 - 민주당은 결혼-출생-양육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위해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출생기본소득, 아이돌봄서비스 및 수당 확대 등 무한국가책임보장, 남성육아휴직 강화, 운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등의 공약 제시
 - 국민의힘은 저출산 관련하여 '일·가족 모두 행복'과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등 두 개 분야를 할애하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민간돌봄으로 확대, 늘봄학교 무상 시행,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의 공약 제시
 - 녹색정의당은 저출생의 원인별(주거:10+10집 걱정 해소, 교육: 사교육비 경감, 보육: 18세까지 아동수당, 시간불평등: 노동시간 단축 등)로 공약을 제시하고, 새로운미래는 '미래·저출생·청년' 분야에 출산·양육크레딧을 개선한 부모연금 도입 공약
- ▶ 저출생 이슈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으나 합계출산율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인식하에 원인진단에 따른 과감한 공약을 제시
 - 민주당은 저출생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자산과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력'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고, 신혼부부의 기본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에 집중하는 출생 기본소득 제시
 - △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 자녀 1명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명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명은 원금 전액 감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0~18세 자녀에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펀드계좌 지급, 1억원의 기본자산 형성 지원 △자녀 2명 출생 시 24평, 3명 출생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월세 1만 원 임대 주택 확대, △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 등
 - 국민의힘은 저출생 원인을 '육아 부담 격차'와 '노동환경'이라고 진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과 재원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등 정책 개선안 제시
 -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연 5일까지 사용가능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160만 원으로 인상 등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도 금전적 지원을 추가했는데 3월 25일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 등을 제시
 -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83조 6천억 원에 달하였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 한계를 과감한 공약 이행을 통해 효과 기대
 - 국가와 기업과 가족이 함께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진일보하고, 과감한 현금성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⁹⁾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구조 개혁 과제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 상존¹⁰⁾

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문제다."라고 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가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다."라고 말함

9) 與 '육아휴직 활성화' 野 '금전적 지원'... "딱 표(票)만 보고 만든 공약" [심층기획-22대 총선 공약 점검 ③ 선거 때마다 내놓는 '저출생 공약'] 세계일보(24.3.7) 보도자료 참조

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24.3.29.).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

II. 공약 분석 및 시사점

과감한 공약을
뒷받침할 자원 계획은
막연하여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 등 입법화
노력이 필요

재정계획 등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는 문제 반복

- ▶ 과감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이 지출 구조조정분 등을 활용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제시하는 문제 반복
 - 양대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 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연 103조원~116조원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이 없어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확보는 세입증가분과 지출구조 증가분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있어 '세폴리즘¹¹⁾'이라는 비판 직면
 - 양당이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의 경우 정부는 연 15조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민주당의 현금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최대 연 23조 원이 들 것으로 추계하면서 재정대책은 지출구조 조정분으로 충당한다고 하여 실효성 의문
 - 여야 모두 내놓은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80조 원 내외로 추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민간 자본을 공동적으로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¹²⁾
- ▶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자원 마련 방안 등이 없는 '선심성 공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있으나 총 13조 원이 들고, 인플레이션(고물가)으로 인한 고통 가중 위험도 있어 면밀한 검토 필요
 - 국민의힘은 3월 31일 내년 5세부터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여당이 기에 정부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만 하여 세부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¹³⁾
 -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은 임기가 끝난 뒤 실제 점검해 보면 이행률이 낮고 책임 지는 주체도 모호한 문제가 있어 공약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정당 차원의 핵심공약을 '22대 국회의원 원선거 정당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릴 뿐, 개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정책공약서라는 선거 공약을 내지 않고 선거 공보물만 내는 상황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에서도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제안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¹⁴⁾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
 - 선거과정부터 입법계획 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입법과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66조 개정 제안
 -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는 재정 추계를 의무화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이 과거 공약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지 정당 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것이 아닌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책 선거 유도

11) 세금과 대중융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을 합친 말로 자원 마련 방안 등 공약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조어임(https://news.zum.com/articles/89084016?cm=front_nb&selectTab=&r=5&thumb=0)

12) 관련한 보도는 YTN(24.3.14) "[공약돋보기] 여야, 일제히 '철도 지하화'...수십조 자원 '물음표'", 노컷뉴스(24. 2.12) "여도 야도 '철도 지하화'...넘을 산 많은데 실효성은 있나" 등 다수의 언론에서 실효성을 지적

13) 연합뉴스.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유아 1인당 지원금 인상" 공약(종합)기재(24.3.31)

1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제출한 448명 중 79.8%가 당선되어 의정활동계획서 여부와 당락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II.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대부분의 공약이
실천되는 지점이
지역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약 이행 촉구(간병비
급여화-지역사회통합
돌봄 연계 등)

공약이 현실화 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약으로 건의

- ▶ 사후 처방적인 공약보다는 사전 예방적으로, 공약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산업과 시장을 형성하여 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 예산 최소화 도모 필요
 -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공약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입소자 중 상당수는 사회적 입원¹⁵⁾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함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재정투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 차원 대책으로 전환 필요
 - 가족간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노인 상당 수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생의 마감을 원하고는¹⁶⁾ 있는 만큼 지역사회 기반 돌봄-요양-의료서비스의 연속적·통합적 구축을 통해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최대한 늦춰 공약 이행 예산 최소화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시간과 인력을 늘리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한편, 연속적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는 시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등 복지과 산업이 선순환되는 돌봄경제(Care Economy)를 구축
 - 돌봄경제는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전통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의 민생경제 활성화의 핵심 이슈
- ▶ 시민단체와 각 분야별 직능단체가 제안한 중요한 의제나 참여하여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총선 후 의견 수렴하여 공약 보완
 -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10대 과제 중 사회적 갈등 완화 관련 공약이 없으나, 의대 증원 등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갈등관리 관련 공약(정책) 보완 필요
 -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고립과 은둔, 초고령사회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안락사 도입, 화장시설 건립 등 예민한 이슈에 대해 지역 의견 수렴 통해 보완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¹⁷⁾으로 추정되고, 청소년(13세~18세)도 약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¹⁸⁾되고 있으나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공약은 미미한 상황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출생 대책 만큼 중요
 -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과 웰다잉이 중요시되고 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¹⁹⁾를 위한 법적 기반마련과 함께 장례복지를 위해 시군 화장시설 신설·보수 예산 확보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²⁰⁾
- ▶ 합리적인 공약(정책)을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바꿔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구조, 극심한 정치·사회적 양극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공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15) 질병 치료 목적보다는 독거 등으로 생활(주거, 식사 등)이나 요양이 필요해 입원한 것을 의미함

16) 보건복지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치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60.2%가 자택에서 임종을 원하지만 가정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하고 가족 간병 부담이 커서 76.2%(2017)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음

17) 보건복지부(2023).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18) 뉴시스 기사(24.3.2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4만명 추정…아이들은 왜 마음의 문 닫나”

19)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8일,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고 있으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작·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20)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사시설 설치 예산을 384억 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519억 원)에 비해 26% 감소하였고, 공설 장사시설 설치 예산은 23년 486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으나, 국회의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혀 증액되지 못함

경기도 관련 공약의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 분담 시
사전 협의조정 의무화
법개정 건의

경기도 관련 공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다수의 시도 및 시군구, 직능단체 등은 각 지역 및 단체 현안을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안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노력 경주
 - 경남은 도정 운영 방향과의 정합성 및 국회의원 임기 내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06개 세부사업을, 세종시는 제2의 수도완성을 위한 개헌 등 26개 지역공약을 건의하고, 창원상의(商議)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공약을 건의하는 등이 대표적
 - 경기도는 민선 7기 전까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제안하였고, 상당수가 공약에 포함, 정책화된 사례가 있음
- ▶ 경기도 관련 공약 중 지역개발 외에 입법 또는 법률 개정 등과 같이 국회 고유기능과 밀접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2대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법률 제정이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

예산이 큰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경계

- ▶ 공약 대부분이 예산 규모와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도 및 시군구 매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행과정 모니터링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의 경우 재원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전가를 사전에 경계
 -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시도 및 시군구의 개입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시설급여의 경우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하여 예산 부담이 급증
- ▶ 중앙정부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
 - ③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약 이행이 되도록 제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원 부담,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